

△보낼곳—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5의1 (우)120-715 동아일보사 여론독자부 「독자의 편지」담당자

※원고양은 6백자안팎이며 원고 끝부분에 이를 주소 나이 직업및 전화번호 명기바랍니다. 채택된 필자에게는 소정의 고료를 우송합니다. 연락처 361-0355~6 FAX 361-0434

古下암살범 韓賢宇 引渡요구를

광복기 政治테러 진상밝혀야

「田炳畋 과문」으로 알려진 지계원 古下 宋鎮禹선생의 암살범 韓賢宇의 동경 생존과 망언은 광복기에 잃어버린 민족지도자의 암살과 그 진상을 새롭게 한다.

홍한 한현우의 말 그대로 송진우선생은 과연 신탁통치를 지지한 매국노였기에 암살되었는가.

광복의 기쁨에 들떠있던 45년 12월28일 우리 나라에 대한 신탁통치를 결정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소식은 온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러므로 다음날 임정을 중심으로 「신탁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위원회」가 초당파적으로 결성되고 임정 내무부장 포고령 1호가 미군정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태업을 명하여 서울시내 8개 경찰서



장이 동조하는등 미군정과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된다. 이에 12월29일밤 경교장에서 「신탁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간부회의가 열렸는데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을 입은 임정은 이 기회에 아주 미군정을 몰아내고 통치권을 행사하자는 주장을 하고 송진우선생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강력히 하되 미

군정과 정면대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회의에서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자택으로 돌아와 쉬다가 새벽에 한현우 일당의 습격과 저격을 받고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신탁통치를 지지했기 때문에 암살했다는 한현우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고 3·1운동을 기회

(최서면)나 백범 김구선생의 암살배후 김지웅과 같이 일본의 대륙 남인의 우두머리 고다마 요시오의 비호속에 일본에 거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를 인도받아 조사하여 광복기 정치테러사건의 진상을 밝히는것은 우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형의 시효나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등은 결코 문제가 안된다. 74년 일본 검찰은 30년 전에 있었던 미야모토 겐지 일본 공산당 당수의 당내 린치 치사 사건을 일본공산당이 합법 정당으로 존재하므로 형의 시효와 관계 없이 공익을 위해 그 진상을 조사한 선례가 있다.

또 국제법상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역시 가해조항, 즉 벨기에조항으로 볼 때 고하와 몽양 암살의 주범이자 교사범인 한현우에게는 해당될 수 없다.

이 경 식<국가경영연구소 소장·서울종로구청진동11의6 삼선빌딩501>

추진하고 일제36년간 국내에서 일제에 맞서 곳곳하게 싸워온 송진우선생을 매국노 운운하는것은 더구나 당치도 않은 말이다.

더욱이 그는 이번에 몽양 여운형선생의 암살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공언을 했다.

6·25의 혼란속에 일본으로 도망친 그는 설산 장덕수선생의 암살범 최중하

바란다. 노영수<경기성남시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건영아파트 112동1704호>

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모든 행이 그 조치를 취했으니 별다른 저항 수단이 없다.

또한 전화요금도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왜 기본요금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요금인상도 시외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명분만

을 내걸고 전체적으로는 대폭 인상시켜 버렸다.

차제에 정부도 이러한 불합리한 요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한 불합리성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소준섭<서울은평구불광3동 484의95·회사원>

집마다 2천, 5천원 혹은 1만원씩 받거나 아예 받지 않은 집도 있다는 것이다.

적십자 회비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도 아니고 반장 임의대로 얼마를 내라는 처사는 옳지 못하다고 본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적십자 회비를 매년 내야하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김춘하<서울서초구내곡동 1의1973>

「과외망국론」은 편견근면한 학생 더 많아 김진섭씨의 글을읽고

2월23일자 김진섭씨의「과외망국론」을 벗어나자는 기사

것이였다. 농협은 예금을 유치하려고 도장을 한부로 만들어서 찍었던 것이다. 결국 수수료를 내고 인감을 바꾸어 돈을 찾았다. 농협에서 이렇게 서민을 우롱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 경 남<강원원주시원동203의1 6통1반>

結婚 호화판 준비 씀씀

자료가 되어야 한다.

장남의 호화결혼식문제 하다가 그의 장관으로서 업무수행에 별로 흥미될 수 없다는 관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으나 이런 관대하고 안일한 시각이 한국병을 더욱 깊게하여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박장관의 보사행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의심스럽다. 그가 국민들에게 겸손한 생활을 하라고 설득할수 없을것 같기 때문이다.

김기욱<서울구로구구로동 685의250철성아파트 5동206호>

국회·대학도서관 이용 일반인 出入 까다롭다

보통 일반도서관에서 구할

수없는 희귀자료는 국회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들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국회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행하는 출입증이 있어야되며 서울대등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재학생이나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에게만 출입이 허용돼 있어 일반인은 출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외국대사관 자료실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현대는 정보화사회다. 일반인이 국회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는 것도 정보화 사회에 크게 역행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의 정보대중화에도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국회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일반인 이용 확대를 국민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수표발행 은행 수수료 이해 안간다

이제 시내에서의 온라인 송금에도 수수료가 붙고 수표로 돈을 찾을때도 수수료를 내야한다. 내가 알기로는 은행의 순수 이유는 국내기업중 최상위 수준이다. 그러

면서 더욱 이유를 챙기려는 은행측의 처사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는 국민들의 저축의욕을 떨어뜨릴 뿐만아니라 국민들

들이 일요일에 골프채를 휘두르며 한가하게 취미생활을 즐길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당국은 공무원 연금매장을 일반 시민과 구별이 되

장 외제·사치품판매 삼가야

수 공무원연금매장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만큼

